

인구·교육·청년정책 강화...광주시, 조직개편 단행

인구정책담당관서 저출생 등 대응 교육청년국 신설 AI기반 인재양성 통합공항교통국, 공항이전 등 총력 "2030 대전환...빈틈없는 미래 준비"

광주시가 인구·교육·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30 광주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7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한다.

광주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인구정책 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배치해 저출생·일자리·복지·주택·교육 등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실효성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 문제와 정부의 인구 정책 기조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청년인구 감소 문제는 일자리·주거·교육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과 청년정책을 강화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대학인재정책과·청년정책과·교육지원정책과로 재편한 교육청년국을 신설한다. 교육청년국은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에 기반을 둔 인재 양성과 교육혁신을 직접 주도한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확산시키고 청년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청년 유입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군 통합공항 이전의 골든타임을 놓

치지 않기 위해 해법을 찾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시기구인 '군공항이전본부'는 '통합공항교통국'에 편입시켜 안정적인 실행력을 바탕으로, 전남도·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전지역 주민과 소통 강화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군공항이전추진단을 운영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되는 통합공항은 사람과 산업을 일으키는 광주의 관문으로 서남권 상생과 동반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도시철도2호선, 걷고싶은길 알이(RE)100 등과 연계한 '대중교통·자전거·보행(대자보)'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도로·주차·미세먼지·온실가스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는 자동차 중심의 교

통에너지를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 에너지로 바뀌어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통합공항교통국'에 대중교통과, 도로과를 전진 배치해 안전과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사람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나아가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또 신활력추진본부는 부서 재편으로 복합소방물과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사업을 중점 추진해 도시이용인구 3000만 시대를 본격화한다.

도시공간국은 기능 재정비로 도시재생과 노후도시 정비를 전략적으로 실행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도시를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립수목원 확대,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수목원·정원사업소 운영, 도시공원을 시민의 쉼 공간으로 관리하는 도시공원관리사무소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급격한 출산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청년층 유출까지 겹친 절박한 상황에서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미래 준비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2년을 빈틈없이 준비해 2030년 광주 대전환을 반드시 실현해 광주가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오는 5일부터 후속 인사를 단행해 조직을 빠르게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민선 8기 2년차 각종 평가서 '두각'

정부합동평가 등 50건 수상

광주시에 민선 8기 2년차 들어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민선 8기 2년차 각종 평가에서 총 50건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9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민선 8기 1년차(2022년 7월~2023년 6월) 수상건수 39건보다 28% 증가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4월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7억7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어 5월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또 '2024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 대표 복지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을 넘어 지난해 '제6회 광주우 국제도시혁신상'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세계에 '돌봄 도시 광주'를 알리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2월 응급의료 유공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월 '2023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도 전년도 대비 평가 등급 2등급 이상승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밖에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2023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 '2023년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등 각종 시민안전 분야에서도 최우수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달 28일 도청 왕인실에서 도 교육청, 14개 시·군 및 9개 공공기관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문 연다

오늘 출범식...치유 프로그램 운영 107억 투입...상담·치료실 등 갖춰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들의 심리적 치유를 지원하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광주에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1일 광주와 제주에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은 1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화동동 치유센터에서 진행된 후 오후 4시30분 제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국가폭력, 적대세력 및 국제 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곳이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행안부는 법 제정과 센터 설립에 앞서 지난 2020년부터 광주와 제주에서 치유 활동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 이후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2021년 치유센터 건립 위치를 광주시로 확정했다.

광주 치유센터에는 총 107억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224㎡ 규모로 올해 4월에 준공됐다. 1층은 상담실과 사무공간, 2층은 다목적실과 물리치료실, 3층은 프로그램실과 야외쉼터로 구성됐다.

아울러 제주 4·3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보듬고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 센터도 동시에 개관한다.

센터는 정신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을 비롯해 1대1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방문 치유 서비스 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광주 치유센터 출범식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강기정 광주시장 및 관련 유족회 등이 참여하며 제주도 치유센터 출범식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를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3유족회 등이 참석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전남도가 매년 확대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 시군에 '언어소통 도우미(통역)'와 긴급 의료비를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숙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내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해외 농촌의 근로자를 5~8개월간 고용하는 제도다. 전남지역에서는 올해 5818명을 배정받았고, 현재 3846명이 입국했으며 1678명은 입국을 준비 중이다. 전남도는 최근 급격히 확대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시군별로 통역이 가능한 언어소통도우미를 지원하고, 치료비 문제로 병원 방문을 주저하는 계절근로자의 신속한 병원 진료를 돕기 위해 근로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인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또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나 요건을 충족하는 숙소 확보가 어려운 농업인과 농협 등을 위해 기존 마을 내 빈집과 농협 보유 유휴 시설을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도록 '숙소 리모델링 사업'에도 21억 원을 지원한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국장·부단체장 등 59명 인사 단행

전남도는 조직개편 및 공로연수, 3·4급 승진과 부단체장 전출·입에 따른 실·국장, 부단체장, 준국장, 과장급 전보인사를 7월1일자로 단행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인사 규모는 국장급 승진 및 전보 7명, 부단체장 6명, 준국장 및 과장급 승진·전보 등 52명으로 총 59명이다.

전남도는 이번 인사로 지역소멸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청년인민국을 정규직제화하고, 인재양성교육국을 신설해 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 준비 및 지역 성장 앞장에도 나섰다.

부단체장은 전남도와 시·군간 상호협력과 소통에 중점을 두고 정책수립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이들로 선발했다.

4급 승진자 13명 중 여성 공무원이 30.8%(4명)로 여성 공무원의 약진도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리더십, 정책판단력, 전문성 등 직무역량과 도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일자리·경제·관광·건설 분야 등 민생경제 최일선 부서에서 성과를 낸 것을 고려해 발탁 인사가 이뤄졌으며, 다만 영광과 곡성은 군수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의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올 연말까지 유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15일까지 5급 팀장급 이하 인사를 실시해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사명단 16면 오지현 기자

전남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한다

영광 월평마을 5만㎡ 3MW규모 자체 특별법 마련...법제정 건의

전남도가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 쌀과 전기를 함께 수확하는 국내 최대 규모 마을 주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 본격 나선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업 부지를 공모·선정한 이후 2년에 걸쳐 전남도, 영광군, 마을주민이 합심한 노력 끝에 지난달 26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단지 조성은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이 사

업주체가 돼 월평마을을 약 5만㎡ 면적의 간척지에 3MW규모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1단계로 2024년까지 1MW준공을 완료,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상업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월평마을 사례는 현재 평균 60kW 수준의 소규모 실증단계인 영농형 태양광의 국내 최초 상용화 모델로, 농지잠식도 없고 주민 수용성이 높아 지속가능한 최적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발전 수익을 토지소유자, 경작자 뿐만 아니라 햇빛연금으로 마을주민까지 모두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농촌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지

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 받고 있다.

산업교육연구원도 비 재배농가가 영농형 태양광을 병행하면 20년간 335%의 농지 활용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도는 영농형 태양광을 본격 확대해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 공급능력을 높이고, 데이터센터와 첨단 RE100 수요기업을 유치하는 등 도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영농형 태양광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법률 제정을 적극 건의 중이다. 오지현 기자